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박영광 (인턴기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2017년도 말에는,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는다. 하지만, 이후 몇 개월 동안 남북한의 상황은 국민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류와 변화가 있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4.27 선언,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월 말 평양의 남북정상회담. 이 외에도 남북고위급회담 및 수차례에 걸친 미국무부장관의 북한 방문 등 북한을 둘러싼 국내의 움직임들은 이전과는 다른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SNS의 글들을 보면, 종전 선언과 남북 통일을 통해서 민족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바라거나 현정권과 현정권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이 얼마나 오랫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던가. 국제 패권 싸움과 이데올로기의 마찰 등의 국외 세력의 영향으로 인위적인 분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딛고, 이제야 비로소 자유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뜨겁던 통일에 대한 열기가 다시금 피어나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일까.

필자는 27살의 대학원생으로서, 친인척에 이산가족도 없을 뿐더러 과거 분단의 아픔에 대해 느낀 바는 거의 없다. GP¹에서 저 너머 북한 땅을 보거나, 만주 땅에서 북한을 보며 애뜻한 감정을 느낀 적은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를 느끼기에는 이미 세대가 많이 지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필자가 그러한 감정을 품기에는 이미 북한이 저지른 도발의 역사가 너무 깊다. 북한의 도발들과 핵실험 등은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이 글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다. 아이러니하게도 핵실험이 완료된 직후, 북한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절대 민족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헤아릴 때, 분단의 아픔 해소나 민족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며 국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그리고 “국제 패권 견제”를 들 수 있다.

가. 비핵화

현재까지 수많은 통일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 정책의 골자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북한의 “비핵화”
 2.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재 완화”
- 문제는 북한의 대남 정책은 위의 순서를 반대로 하며 범위를 달리하여, 아래의 골자를 내세운다는 점이다.

1. 대북 “제재 완화”
2. 북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과 미국은 급격한 긴장감과 견제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제재 완화 및 비핵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가 있을 수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 없는 비핵화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든 이루어 내야 장기적으로 확실한 평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비핵화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내지는 미국이 공언하였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 핵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선에서 타협을 한다거나, 협상이 결렬되어 북한이 핵을 전력화하는 것이 곧 비핵화의 실패일 것이다.

1 Guard Post,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비핵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의 전력화 수준에서 핵 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로 가는 것이 큰 발전이라는 오해를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남한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한반도에서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1차 목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비핵화를 통해 남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핵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는 그리 고민할 결정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위원장 때부터 지금까지 대남전략의 명칭과 세부사항들을 바꿔왔지만, 핵심 사안들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해왔다. 곧,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도 핵 군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제재 정책들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차 남북정상회담의 4.27 선언부터 최근 평양에서 치른 남북정상회담 선언문과 군사합의서에 이르는 모든 관련 발언들에서 예외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은 자유평화통일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를 역행한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성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고, 언론도 북한의 핵 폐기를 신뢰하는 기사들을 내놓곤 했다.

북한에서 인민들에게 화전양면전술을 뻔하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내용에 부합하여 흘러가는 정세를 묵과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 감추려는 발언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공동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북한이 비핵화에 발 벗고 나서는 듯한 모습을 그린다. 하지만, 도대체 핵실험을 완료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에 핵실험장 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사라진 핵미사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완료한 핵 관련 실험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온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정지권의 전략에 있어서 형식적인 핵 폐기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금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패권 견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나 국내 범죄율이 비교적 현저하게 낮은 편으로, 치안 수준이 높은 국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지역으로서 전 세계에서 사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국가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들 간의 충돌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기본 국가 이념으로 삼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세력이 커지고 있는 수정주의, 문화마크스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등의 영향권으로서,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성향의 정책들과 프레임 싸움도 난무하는 곳이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신형국제관계 전략,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사이에서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문제는 양국 정치권 내의 교류와 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그 국제 관계가 국내 정치 움직임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또한 상기 언급한 핵 폐기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먼저 강조하는 것과 그 제재의 핵심으로 “주한미군”을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통해 이

해를 할 때 비로소 본모습을 알 수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전략적 이익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한반도가 자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패권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단지 북한을 견제하는 군사력이 아니며,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군사 기지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인 비핵화를 옹호하며 그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부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인 안보와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와 안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반핵 및 반공 정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변 국가별로 평화 체제 및 자유 평화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국별로 통일에 대한 시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1. 미국: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중국 및 러시아 견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친중 성격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북한의 흡수통일이나 자유평화통일을 지지한다.
2. 중국: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측으로 편입되어 통일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3. 러시아: 중국과 비슷한 입장으로, 북한

이 흡수통일되거나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시베리아 개발로 인해 평화 체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옹호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4. 일본: 통일이 한국이 공산주의 측으로 편입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더라도 단일 세력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깊은 동맹관계인 일본은 미국의 시각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4개국의 시각을 아우르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 특정 성향을 취하지 않은 중립적 성격의 평화 체제까지 발전하는 것에는 어느 국가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기 4개국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비교 대조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을 반대할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견제가 자유평화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필자는 자유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우리나라가 정해야 할 국제 전략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 체제 유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방향성으로는, 사회 시스템과 직결되는 군사 동맹을 미국과 유지하되 중국과 적극적인 경제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다. 또한,

스위스와 같이 영세중립국과 같은 면모를 일부 유지하되, 한미 동맹의 선을 유지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는 사실상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의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3가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필수임을 알 수 있다.

1. 북한의 비핵화로 인한 장기적인 평화 체제
2. 미국과의 군사 동맹 및 미군 주둔에 대한 현상 유지
3. 중국과 경제적 교류 활성화

다. 결론

현재 북핵 실험 완료, 중국의 급격한 부상, 신마르크스주의 등과 함께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 관계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전략 대상인 북한에 대한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제 환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다자외교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전략과 그 역사를 분석하여 냉정한 판단과 인내심을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인 핵 폐기 또는 조건적인 핵 폐기를 거부하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일절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동맹인 한미일 동맹을 공고화하는 노력과 함께, 중국과의 적극적인 경제 교류를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이며, 국민의 단합된 결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목소리, 정치권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목소리는, 정부가 비핵화 압박을 강하게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비핵화에 대해 비판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주한미군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한목소리로 지지하되, 경제 등의 교류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